

광주 군공항 해결 후 민간공항 이전

이용섭 시장 "민간공항 이전 시기 4자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
전남도·도의회 "군 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논의해야" 진통 예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내년 중으로 광주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할 수 있도록 전남도, 국방부, 국토부 등에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시장은 시민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의 제안을 일부 수용해 민간공항 이전 전제조건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

어 "내년 중 민간공항 이전이 가능하도록 군 공항 문제 조기 해결에 전남도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 시민의 깊은 뜻을 반영한 시민 권익위 권고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그리고 정부와 공항 정책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현재 여건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 중 최적의 해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시민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이 시장에게 '민간공항 이전 계획을 유보하고 군 공항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 후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광주 시민의 뜻(시민권익위 여론 조사)을 존중함은 물론 광주전남 상생의 정신도 훼손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중심이 돼 논의하고 있는 '4자 협의체'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군 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돼 민간공항이 최대한 빨리, 가급적 내년에 이전·통합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협의체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전남도·국방부·국토부는 지난달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용역을 실시하는 등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군·민간 공항 문제를 해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현호 기자 khk@kwangju.co.kr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9월 0시 기준 68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서 또 5명 코로나 추가 확진

'비격리' 교도관 양성 판정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감염경로가 다양하고,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확진자도 다수여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선 해외유입 2명을 포함한 총 5명(지역 769-773번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769번은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772번과 773번도 각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광주 763번, 광주 649번의 접촉자들이다.

앞서 전날 밤 12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이 쏟아졌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광주 763-764번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광주 635번의 연쇄 전파 사례로 확인됐다. 광주 765-767번재 확진자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와 접촉 사례로 분류됐다. 광주 766번은 전북 확진자 가족이다.

광주 768번은 감염경로가 전남대학교병원인 광주교도소 직원이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교도소에서는 직원과 수용자 일부가 격리 조치됐는데 768번 확진자는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 지난달 3차례 진단검사를 받기도 한 광주 768번은 교도소 안팎에서 업무와 일상생활을 이어가다 기존 확진자인 광주 756번과의 접촉 이력이 확인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확진판정을 받은 당일 선별진료소 방문 전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외부업무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교도소 직원 확진자와 관련해 기존 방역 시스템에 허술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전략 전북, 호남권서 분리 '충격'

광주·전남, 대구·경북과 함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로 전북을 호남권에서 떼어내 강원·제주와 강소권 메가시티로 국가 불균형 고착·심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권에서 전북과 광주·전남을 분리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내놔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을 호남권에서 떼어내 강원, 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로, 광주·전남은 대구·경북과 함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등은 그랜드 메가시티로 묶어 사실상 성장 주도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국가 불균형이 고착·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국가 사업 및 재정을 집중하는 과거의 고질적인 행태가 반복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그랜드 메가시티와 기타 지역 간 양극화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세종시로의 국회 일부 상임위 이전 및 행정수도 구상을 발표하면서 광주·전남 등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 내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는 행정수도 구상을 9일 발표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수도권-동남권-충청권을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등 '3+2+3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

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추진단은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특위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논의한다.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동여의도는 흥룡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로 각각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고 광화문 일대에 '유엔시티'를 조성, 다수의 유엔 기구를 유치하고, 200여개 국제스포츠클럽수도 유치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 이전은 미뤄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추진단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추진단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는 '3+2+3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수도권-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등이다.

하지만,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가 과연 영호남 등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미지수인데다 전북, 강원, 제주 등이 강소권 메가시티 방안을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해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단장은 "추진단은 박정희·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져 온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4개월 가량 활동했다"며 "추진단 제안을 국회 특위가 이어받아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메가시티 추진 등은 입법 조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해 포괄적인 안을 제시하되 특위를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업계 코로나로 힘겨운 한 해 ▶6면

물 오른 손흥민... 눈부신 골 행진 ▶18면

신 팔도 명물 - 겨울 진미 양미리·도루묵 ▶22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라남도
JeollaNamdo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전남도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2021년 신규 시책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 난임수술비 연2회 추가 지원
- 신생아 양육비 확대(30→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3개소 운영 : 해남 강진 완도
 - 2주 이용료 : 154만원(수급자, 셋째아 등 46만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예비부부 또는 3년 이내 신혼부부
 -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 48만원 상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 방문, 산후조리·가사 지원(5~20일)
 - 둘째아 부터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

-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5~15만원, 36개월)
- 신생아 양육비 지원
 - 30만원 / 시군별 양육비(첫째아 평균 230만원) 별도
- 난임부부 치료 지원
 - 양방 시술 : 회당 20~110만원(최대 17회)
 - 한방 치료 : 180만원